

# 제3차 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

---

---

2022. 2. 9.

증 권 선 물 위 원 회

1. 일 시 : 2022년 2월 9일(수) 14:10~18:16

2. 회의방식 : 온-나라 PC 영상회의

3. 출석위원

도 규 상 위 원 장

이 명 순 위 원

이 준 서 위 원

박 재 환 위 원

송 창 영\* 위 원

\*의결 제6호 회피

## 4. 회의경과

### 가. 개회

위원장이 성원이 되었음을 확인 후, 2022년도 제3차 증권선물위원회 회의 개회를 선언함.

#### 1) 회의록 보고

- ☐ 2022년도 제2차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 회의록을 서면보고한 후 원안대로 접수함

#### 2) 안건 심의

- ☐ 의결안건 제251호(2021) 『(주)○○○○○ 및 (주)□□□□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행위 등 조사결과 조치안』을 재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자본시장조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위원) 비적정 가능성이라는 것 자체가 미공개정보가 생성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에 있어서는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함. 설령 그것이 미공개정보라고 하더라도 B씨가 미공개정보를 C씨로 하여금 이용하게 할 의도가 있었는지, 그것이 미공개정보와 관련한 B씨의 혐의를 성립하게 하는 구성요건인데 그러한 의도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도 금감원의 입증이 굉장히 부족했다고 생각함. 만약 일말의 가능

성이 있다면 검찰에 통보는 하지 않더라도 수사 참고사항으로 제공해서 검찰이 더 나은 수사력과 증거수집능력을 바탕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지 않겠나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우리가 할 일을 검찰에 떠넘기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함. 적어도 70% 정도의 가능성은 있는데 우리가 90% 이상의 확증은 없다 할 때 우리가 검찰로 넘겨서 “이것은 한번 확인해 봐 주십시오.” 하고 수사참고사항으로 제공을 하는 것이지, 위원회에서 판단컨대 20% 내지 30% 정도에 불과한 가능성을 모두 다 검찰로 넘겨서 “수사 참고사항으로 드릴 테니 한번 수사를 해 봐 주십시오.”라는 것은 우리가 행정기관으로서 조사를 한 후에 검찰에 고발통보 해야 되는 책임을 조금은 방기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 위원회에서 판단했을 때 이것이 가능성이 10%, 15%, 20% 수준에 불과해서 입증이 부족했다면 위원회가 그것을 거절(reject)하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함. 그래서 저는 ‘혐의 없음’으로 수정의결할 것을 건의 드리는 바임.

- (참여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보제공자의 혐의가 입증되기 위한 요건이 있고 또 미공개정보를 전달받은 사람의 혐의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B씨가 이 정보를 전달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굉장히 다툼이 많은 것으로 보임. 그다음에 C씨가 정보를 전달받았는지, 즉, B씨가 C씨와 이런 회계정책 이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당시에 정보제공자인 B씨에게 미공개정보를 전달한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 인식이 B씨의 혐의 자체에서 흔들리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혐의 입증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불완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

- (위원)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함. 요건이 구성되려면 미공개정보여야 하고, 그것을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 시켜야 되는데, 3월14일에 회계처리위반 사실 통보를 미공개정보라고 볼 수가 있겠느냐는 것에 대해서 100% 확신이 없음. 단지 비적정 감사의견의 가능성 정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가능성을 미공개정보라고 보기에선 조금 무리가 있으니 미공개정보라는 것에 대한 성립요건이 충분하지 못함. 그다음에 B씨는 내용을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전달을 했기 때문에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자에 해당이 안 됨. 그리고 전달받은 사람 입장에서선 그 내용을 듣자마자 매도를 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나흘 정도 지나서 매도를 했기 때문에 C씨 입장에서선 이것이 이 정보에 대한 유일한 통로(channel)는 아닌 것 같아서 직접적인 관련성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보임. 따라서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 바임.
- (위원) ○위원님과 ○위원님 의견에 동의함.
- (위원) 저도 같은 생각임.
- (위원장) 제251호 안건은 다음과 같이 수정의결하겠음. 혐의자 B 및 C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미공개 중요정보의 생성 여부, B가 C로 하여금 미공개정보를 이용하게 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의 여부 등이 뚜렷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이에 따라서 B 및 C의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으로 수정의결하겠음. 나머지 혐의자 A의 시세조종 행위에 대해서는 금감원 원안대로 의결토록 하겠음.

○ 수정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수정의결함

\* 만장일치로 수정의결을 의미함(표결이 있는 경우 별도 표기)

☐ 보고안건 제3호 『공매도 규제 위반 과태료 부과기준안 보고』  
을 상정하여 서면보고로 갈음함.

○ 원안접수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접수함

\* 만장일치로 원안접수를 의미함(표결이 있는 경우 별도 표기)

☐ 보고안건 제4호 『(주)○○○○○○ 주식에 대한 부정거래 행위  
긴급조치 결과 보고』을 상정하여 서면보고로 갈음함.

○ 원안접수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접수함

☐ 의결안건 제151호(2021) 『○○○○○○ 공매도 제한 위반 조사결과  
과 조치안』, 제16호 『(주)두산 등 5개사 주식에 대한 공매도  
제한 위반 조사결과 조치안』, 제17호 『솔브레인(주) 등 3개사

주식에 대한 공매도 제한 위반 조사결과 조치안』, 제18호 『에스케이(주) 등 939개사 주식에 대한 공매도 제한 위반 조사결과 조치안』을 일괄상정함.

▷ 진술인(제17호 관련)이 입장하여 의견 진술함.

▶ (진술인) ○○○○○○에서 결제일(Settlement Date)을 6월 18일이라고 문서로 확인해 주었음. 그래서 6월19일하고 그 다음 영업일인 6월20일 양일간에 걸쳐서 (주)젠큐릭스 주식을 매도주문 내게 되었고 그중에서 합쳐서 5,520주가 재상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매도 주문으로 주문이 나가게 된 상태임. 나중에 확인을 해 보니까 결제일(Settlement Date)이라고 ○○○○○○에서 알려주신 6월18일은 현금결제일을 의미하는 것이고 주식이 코스닥에 재상장되는 일자는 그보다 더 뒤인 것으로 사후적으로 확인을 하게 된 사안임. 그래서 ▲▲▲▲ 측에서는 결과적으로 공매도 사항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안을 나중에 개선하고 유사한 공매도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가적인 사후확인절차를 강화했고 시스템적으로도 주식의 결제일과 재상장일이 이렇게 나누어지는 경우에는 필드(Field)를 구분해서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였음. 본 사안은 공매도에 대한 고의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점을 참작해 주시기 바람.

▶ (진술인) ◀◀◀◀◀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솔브레인(주) 주식을 청산할 것을 요청 받았음. ◀◀◀◀ 측 직원의 과실로 인해서 분할이 두 번 이루어진 것으로 주식수가 증

가하는 단순과실이 있었음.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발견한 즉시 바로 수정하기 위한 절차를 밟아서 진행을 했음. 이런 동일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매도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 절차를 이 프로그램에도 적용시키도록 조치를 취했음. 아울러 단순히 이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뿐만 아니고 저희가 나중에 한국주식을 이전하는 서비스를 할 때는 한 번 더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삼중절차를 마련하도록 하겠음. 이러한 점을 고려해 주시기 바람.

- (위원) ▲▲▲▲ 관련하여 자조심 때 발생원인이 완전히 제3자에게 있는 경우에는 부과면제를 한 경우도 있었다는 식의 진술을 하셨다고 하는데 금감원에서 조사해 보니까 면제한 경우는 없고 경감한 경우가 있었고 그 경우도 본 건과는 조건이 많이 상이하다고 하는데 인지를 하고 있으신지?

▶ (진술인) 사실관계에 따라, 주된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 같기는 함. 저희도 사실 공매도 자체가 발생한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상황이고, 다만 ▲▲▲▲ 측에서는 확인을 게을리해서, 과실로 인해서 공매도 위반이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지 않은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고를 해 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게 되었음.

▷ 진술인(제17호 관련)이 퇴장함.

- (위원장) 자조단장님께서 각각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보



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직무대리가 [공매도 규제 위반 사안별 조치안]을 보고함

- (위원장) 자조단장 보고내용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신지?
- (위원) 없음.
- (위원) 없음.
- (위원) 없음.
- (위원) 없음.
- (위원장) 제151호 및 제16호부터 제18호까지 이상 4건의 안건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에서 보고한 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음. 아울러, ○○○○○의 공매도와 관련해서 증선위 차원의 권고사항을 말씀드리겠음. ○○○○○의 공매도 규제 준수여부 판단은 법인전체가 아니라 시장조성계좌별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러한 증선위의 원칙을 한국거래소를 통해 ○○○○○들에게 잘 안내되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투업 규정 6-30조와 관련해서 공매도 판단기준이 상위 법령과 상충되는 부분이 없는지, 동 규정상 매도자에 대한 조항이 ○○○○○에게도 적용되는지 등 규정 개정의 필요성과 내용 등에 대해 검토하여 추후 증선위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안의결(제17호, 제18호) 및 수정의결(제151호(2021), 제16호)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제17호, 제18호) 및 수정의결(제151호(2021), 제16호)함

- 의결안건 제19호 『한국투자증권(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함.

▷ 진술인이 입장하여 의견 진술함.

- ▶ (진술인) 투자광고와 관련된 것은 겹쳐히 받아들이고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시스템을 재점검하고 직원 교육을 더욱 철저히 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팝펀딩 펀드 관련 설명확인 의무 위반에 관련되어서는 법리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양정과 관련된 부분, 특히나 정상참작을 할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타사 사례와도 비교해서서 선처와 재고를 부탁드립니다. 자본시장법령상 설명확인수단으로 “녹취” 방식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해피콜”을 통한 설명확인방식이 배제되어야 되는 것인지, 법리적으로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당한 기간”을 과거 선례는 “7영업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셨는데 본 건에서는 7일로 단축하여 제재하였다는 점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적 판단”이라는 금융위의 법령해석임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정이나 부득이 한 사정이 발생한 상황 모두 고려하지 않고 예외 없이 위반으로 의율하여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본시장법령 제 47조제2항(설명 의무)에서 녹취의 방식으로 설명확인 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고 명백히 규정되어 있음. 법령상 설명 의무 이행 확인 방법으로 녹취를 통한 해피콜 방식이 인위적으로 배제되거나 그럴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검사국에서 유효한 설명확인 의무 이행이라고 말씀하시는 서면설명확인 내용을 보더라도 그 방식이 고객이 직접 '듣고 이해하였음'에 서명하고 자필로 기재하였는지 아니면 해당 고객이 직접 통화를 통해서 녹취의 방식으로 진행하였는지 방식의 차이만 있을 뿐임. 설명내용 확인 의무 이행 시기는 법령상 규정이 없고 실무상 과거 선례가 7영업일을 기준으로 하나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고 더 나아가 저희는 7영업일이 아닌 7일을 기준으로 제재의 건수를 평가 받았음. 총 7건에 대해서는 '해외여행', '해외 체류', '고객 치료 일정', '암치료' 등의 일정으로 인해서 서면확인을 받은 기간이 불가피하게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연되었음.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7일 또는 7영업일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위반이라고 평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재고를 부탁드립니다. 해피콜(녹취)이 설명확인 의무 이행 수단에 해당한다고 보신다면 저희가 7일을 기준으로 18건이 제외되어야 하고 7영업일 기준으로 21건이 제외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해피콜(녹취)이 설명확인 의무 이행 수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신다고 하더라도 앞서 말씀드린 7건은 서면확인 지연이 된 특별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태료 부과금액 양정에 관한 의견임. 32건 중 8건은 환매가 연기된 적이 없기 때문에 위반결과가 '중대'

가 될 수 없다는 것이 저희의 의견임. 금융소비자 손실 초래가 위반결과의 ‘중대’의 원인으로 제시되고 있으나 잘 아시다시피 한국투자증권(주)은 팝펀딩 펀드를 비롯하여 사모펀드 전부에 대해서 투자원금 100%를 보상하였음. 다수의 투자자의 투자손실을 원인으로 과태료 10억 원의 최고 한도액 규정 적용이 배제되었음. 결과적으로 투자손실을 입은 투자자들이 全無하다는 점도 반드시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반동기에 대해서 하향조정을 부탁드립니다. 위반결과가 ‘중대’한 것이 환매가 연기되어 금융소비자 손실을 초래하였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말씀하시나 위반으로 지적된 32건 중 8건은 정상상환 되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아무런 투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음. 처음부터 정상상환된 8건을 일률적으로 ‘중대’로 평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결국 투자원금의 100%를 보상하여 결과적으로 금융소비자 손실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전체적으로 위반결과를 “경미”로 보아주셔야 되는 것은 아닌지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일반적인 불완전판매의 경우와 달리 투자원금 100% 보상 등 투자자보호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소비자 신뢰를 회복한 점을 감안하여서 과태료 최고한도액(10억 원) 적용하는 것을 배제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결과적으로 투자자에게 손실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반결과를 ‘중대’로 보는 것은 다소 억울한 측면이 있음. 서류확인과 더불어 해피콜을 시행하였다는 점도 법상 설명내용 확인의무 이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실제 내용상 설명확인을 한 것은 분명함. 이로 인해서 이중적으로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고 있었다는 점 역시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함. 이

같은 점은 타사 사례와 차별점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서 정상참작을 부탁드립니다.

- (위원) 해피콜로 설명내용 확인의무를 하든 아니면 실제로 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설명내용 확인의무를 하든 사실상 동일하다고 주장을 하시는데 다른 회사들은 어떤지?

▶ (진술인) 다른 회사들도 해피콜 제도 자체는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위원) 설명내용 확인 주체에 대해서 법상 규정하고 있는 것과 소비자보호부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인지?

▶ (진술인) 법상에서는 설명내용 확인의무 이행 주체를 금융투자업자라고 하였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판매한 것에 대해서는 한국투자증권(주)이라고 보는 것이 법령상·해석상 맞다고 생각함. 저희 해피콜 제도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2영업일 내에는 소비자보호부에서 직접 해피콜을 실행하고 있음.

- (보고자) 법률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로 되어 있지만 이행을 위한 표준투자권유준칙상으로 판매담당 임직원이 설명내용 확인의무 이행 주체로 명시되어 있음.

- (위원) 회사 측에서는 7영업일로 하는 경우 건수가 줄어든다고 주장하신 그 논거는 해피콜로 설명의무를 다 했다는 전제 하에 해당되는 것인지?

▶ (진술인) 맞음.

- (위원) 그러니까 전제가 충족이 되지 않았는데 그다음 얘기를 하시니까 혼동되는 것 같음. 투자자 손실이 없었기 때문에 10배 적용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고 주장하고 계시는데 투자광고 쪽에서 손실발생이 2건 있음. 그러면 그 건은 10억 원 이외에 별도로 산정해야 되는 것이 논리상 맞는 것이 아닌지?

▶ (진술인) 이분법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그래도 이러한 사모펀드 사태를 통해서 한국투자증권(주)이 선도적 결단을 하여서 투자자 보상을 하였는데 이런 것에 대해 감안을 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 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린 것임.

- (위원) 한국투자증권(주)의 내규는 설명의무와 그 확인에 대하여 어떻게 되어 있는지?

▶ (진술인)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내규를 직접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아서 관련된 내용은 저희가 추후에 확인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음.

- (보고자) 참고로 저희가 파악한 한국투자증권(주) 내규는 제14조(설명 의무)에 ‘임직원 등은 고객을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법상 정한 사항에 대해서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음.

- (위원) 바로 서명을 받지 않은 사례(case)에 대해 특별히 관리가 되고 있는지?

▶ (진술인) 함께 확인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음.

- (위원) 언론에 보도된 사건과 비교해서 사후보상, 투자자에 대한 보상이 다른 점이 있는지?

▶ (진술인) 한국투자증권(주)은 사모펀드 판매의 투자원금에 손실이 발생한 펀드 전부에 대해서, 팝펀딩 펀드뿐만 아니라 펀드 전부에 대해서 원금 100% 손실 보상을 하였고 그것은 현재까지도 업계에서 유일하다고 보시면 됨.

- (보고자) 회사의 주장대로 선제적으로 100% 투자자 피해보상을 한 것은 한국투자증권(주)의 진술이 사실임. 그런 점을 감안해서 제재심에서 기관조치와 관련 임직원 신분제제한 조치를 1단계 감경하여 제재수준을 결정해서 제재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임.

- (위원) 진술하신 취지가 해피콜 자체를 설명내용 확인의무의 한 방법인 “녹취”에 해당된다고 주장을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설명내용확인에 해당하는 “녹취”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추가적으로 중요한 상품에 대해 이런 해피콜 제도에 따라서 판매적정성을 확인했으니 양정요소로 고려해 달라고 주장하시는 것인지, 어떤 의미인지?

▶ (진술인) 주장하는 바가 두 가지 다 있는 것은 맞으나, 주되게 말씀드리는데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 후자에 해당함. 그렇기 때문에 해피콜에 대해서 설명내용 확인의무 이행수단이 반드시 “녹취”의 방법으로 된다는 것을 강하게 주장한다기보다는 이렇게 이중적으로 불완전 판매를 예방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다는 점을 양정에 고려해 달라는 취지임.

▷ 진술인이 퇴장함.

- (위원) 설명내용 확인의무 위반 관련 7일 이후에 서면 사후 보완 건들 중 특별한 사정을 보면 고객치료 일정과 혈액암 치료라고 해서 그 2건의 경우에는 위반결과를 ‘경미’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듦. 투자광고 절차 위반 중에서 229건은 ‘경미’이고, 29건은 ‘중대’인데 그 ‘중대’ 중에 2건이 투자자 손실이 발생한 건임. 그래서 전체를 10억 원을 놓고 감경하되 그 2건은 별도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논리상 맞지 않는가 하는 생각임.
- (참여자) 설명내용확인인 설명할 때 반드시 받아야 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나중에 받는 것이 법취지에 맞아 보이는데 이 사건의 경우 왜 7영업일까지 예외를 인정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근거가 어떤 것이 있는지, 사안 별로 판단을 해야 될 테니까 그 근거를 확실히 해야 될 것으로 보임.
- (보고자) 확인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법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하게 될 경우에는 투자권유시에 가입 전 설명의무확인까지



이행을 해야 마땅함. 다만,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관련 법령에 대한 금융위 해석이 상당기간, 가입시점에서 일률적으로 위반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고 개별적으로 상당기간 내에 하면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 이후에 과거 조치사례가 3건 정도 있었음. 7일과 7영업일은 사안에 따라서 변동성이 조금 있었습시다라는 과거 사례를 반영해서 본건에 대해서 적용되는 7일로 해서 저희가 건수를 산정 했었음. 회사가 주장하는 7영업일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위반건수는 동일한 것으로 되어 있음.

- (참여자) 향후 이러한 사안이 또 발생하게 되면 계속해서 이 7일과 7영업일이 어떻게 보면 제재의 기준이 되고 업계에 잘못된 신호(signal)를, 7일 이내에만 하면 문제가 없는 것이라고 해서 자꾸 확인을 미루게 되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까?
- (보고자) 아무래도 그럴 소지가 없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음. 다만, 고객이 지병 등을 이유로 현실적으로 7일 이내에 확인을 이행하기 어려운 사정 등이 있어 위반동기를 '상'에서 '중' 정도로 감액할 수 있는 양정 참작사유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함.
- (위원) 해피콜마저 하지 않은 경우와 설명내용 확인의무를 이행을 한 경우에 대해서 무차별하다고 보시는 것인지?
- (보고자) 해피콜을 하지 않는 증권회사는 없음. 다만, 타증권사의 경우 해피콜을 했다고 해서 설명내용 확인의무까지 다 이행했다고 보지 않고 있는 것임. 그렇기 때문에 차별적으로

과태료 산정에서 위반의 동기와 위반의 결과를 판단하는데  
고려요소가 되기는 어렵다고 봄.

- (위원) 설명내용 확인의무 위반, 투자광고 절차 위반에 대해  
서는 그동안 판단 사례에 비추어서 위원님들의 논의를 통해  
서 양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확정할 수 있을 것 같음.
- 보류하는 것에 동의함

⇒ 보류함

(16시03분 정회)

(16시20분 속개)

- 의결안건 제20호 『주권상장법인의 2019 회계연도 감사 前 재무  
제표 제출의무 위반혐의 등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을 상정함.

▷ 진술인이 입장하여 의견 진술함.

- ▶ (진술인) ○○○○(주) 경영지원팀장임. 2019회계연도와 관  
련된 감사 前 연결재무제표 제출을 당사에서 하루 늦게  
제출하였으며, 당시 재무제표 제출을 담당하던 팀장이 해  
당 건에 대한 아무런 진술 없이 업무를 도피하여 그와 같  
은 사안이 발생하였음.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 진술인이 퇴장함.

-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 의결안건 제21호 『비상장법인의 2019 회계연도 감사 前 재무제표 제출의무 위반혐의 등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을 상정함.

▷ 첫 번째 진술인이 입장하여 의견 진술함.

▶ (진술인) ○○○○○○○(주) 경영지원팀장임. 저희 회사는 2019년 외감 대상에 해당되나 감사인에게 감사 前 재무제표 제출의무를 누락한 건으로 연락을 받고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되었음. 저희는 2019년만 자본금 증자로 인해서 외감 대상에 일시적으로 포함이 됐음. 저희가 증선위에 신고 못한 것은 사실(fact)이지만 감사인에게는 저희가 E-mail로 감사 전에 감사 前 재무제표 제출을 했고, 감사 시점에 나머지 주석이나 기타 필요한 서류들을 현장에서 USB로 제출했음. 감사인 지정에 대해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 감사 前 재무제표를 감사착수일 이전에 회계법인에게 제출하셨다고 했는데 그 증빙서류가 있는지?

▶ (진술인) 별도기준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E-mail로 제출한 증빙이 존재하고, 현금흐름표와 주석은 현장검사했던 2월5일에 USB로 제출하였음.

▷ 첫 번째 진술인이 퇴장함.

▷ 두 번째 진술인이 입장하여 의견 진술함.

▶ (진술인) (주)○○○○○ 대표이사임. 2019년도에 이르러서 회사의 상황이 악화됨에 따라서 존속에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되는 업무들을 먼저 처리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회사 내부결산에 관련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 그때 경영진들의 형사소송이 진행되는 바람에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 추가로 말씀드리면 자금이 없다보니까 직원들도 다 퇴사한 상황이었음. 저희가 실질적으로 재무제표를 만들 수 있는 관리직원 조차 없었던 상황으로 보임. 그 이후 2020년 3월3일에 제가 대표이사 직을 수락하게 되어서 지금은 재무상황도 점점 좋아지고 있는 상황임.

▷ 두 번째 진술인이 퇴장함.

▷ 세 번째 진술인이 입장하여 의견 진술함.

▶ (진술인) ○○○○(주) 재경부문장임. 당사의 감사 前 연결재무제표 제출기한은 사업연도 종료 후 70일 이내인 2020년 3월10일까지였으나 하루 늦은 2020년 3월11일에 제출하였음. 지연제출이 발생한 사유는 윤년으로 인한 날짜계산의 실수였음. 새롭게 업무를 맡은 담당자가 2020년이 윤년이라 2월이 29일까지 있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2월을 28일로 계산하여 평년과 같이 3월11일로 제출기한을 착오하여 하루의 지연이 발생하게 되었음. 당사의 개별재무제표 제출은 제출기한보다 3주 빠른 2020년 1월20일에 제출을 완료하였으며, 지금까지 개별 및 연결재무제표 제출함에 있

어서 지연제출한 사례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순실수인 점과 감사와의 재무제표 작성 일정에 영향이 없었다는 점을 정상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연결정산표를 2월25일에 감사인에게 제출을 한 것이 맞는지?

▶ (진술인) 맞음.

- (위원) E-mail로 보냈는데 그 E-mail이 삭제가 됐다는 것인지?

▶ (진술인) 보안 때문에 회사 E-mail을 3개월 이상 보관하지 않음.

▷ 세 번째 진술인이 퇴장함.

▷ 네 번째 진술인이 입장하여 의견 진술함.

▶ (진술인) ○○○○○○○(주)의 경영기획실장임. 회사는 지난 2019년 별도재무제표 제출과정에서 주주총회 6주전 제출기한을 1영업일 초과하여 제출하였음. 회사는 감사 前 재무제표 제출일 당시에는 2020년 3월30일을 주주총회 개최일로 하여 개최할 예정이었으며 그에 따라 주주총회 6주전인 2020년 2월14일에 감사 前 재무제표를 제출하였음. 일정조율 과정에서 주주총회 개최를 당초 예정보다 1영업일 앞당긴 2020년 3월27일에 개최하였고 그리하여 별도재무제표 제출기한이 1영업일 늦었음. 다만, 2019년 연결재무제표의 제출기한은 준수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저희 회사가 이러한 조율을 사전에 충분히 하지 못한 점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 주총일정이 당초 3월30일에서 3월27일로 변경이 됐는데 이것을 언제 변경하셨는지?

▶ (진술인) 별도재무제표 제출 이후 연결재무제표 제출 전에 주총일자가 변경되었다는 것을 인지를 하였음. 그때 제가 안일하게 대처했던 것이 실책인 것 같음.

▷ 네 번째 진술인이 퇴장함.

▷ 다섯 번째 진술인이 입장하여 의견 진술함.

▶ (진술인) ○○○○(주) 기획실장임. 당사는 2020년 전년도 재무제표를 늦게 제출하였지만 3가지 측면에서 정상을 참작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선, 당사가 재무제표를 증권선물위원회에 하루 늦게 제출한 것은 사실임. 하지만 감사인에게 제출한 재무제표는 제출기간 이내에 제대로 제출을 하였고, 특히 회계법인은 2020년 2월5일 본사를 방문해서 직접 감사에 착수했고 이날 USB로 전달한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감사업무를 정상적으로 진행을 했음. 금감원 사이트에는 하루 늦게 올렸지만 감사인에게는 법 취지에 맞게 충분한 기간을 두고 제출했던 것임. 이는 감사를 담당한 회계법인의 근무일지를 통해서도 입증할 수 있음. 둘째, 당사가 감사 前 재무제표 제출의무를 위반한 것은 이번이 처음 있는 일로 단순실수임. 끝으로 설사 재무제표 지연제출로 제재를 받는다 해도 당초 예정대로 작년에 조치가 이루어졌다면 기존 감리조치에 따른 감사

인 지정 3년이라고 하는 기간에 포함됐을 것임. 증선위는 지난 해 9월13일 감사인 지정 1년을 사전통지했고 2021년 10월6일에 회의를 통해서 조치를 확정할 예정이었음. 당초 통지한 대로 10월6일에 조치가 확정되었더라면 2022년 회계연도가 감사인 지정이 될 것이므로 기존 3년의 감사인 지정 조치에 포함되어서 저희로서는 추가적인 부담을 지지 않아도 됐을 것임. 그런데 증권선물위원회가 해를 넘겨서 2022년 2월9일로 연기되는 바람에 2023년도가 감사인 지정 1년에 추가될 경우 결과적으로는 4년 연속 감사인 지정을 받게 되는 것임. 당사로서는 너무나 가혹한 처분이 아닐 수 없음. 결론적으로 고의성이 없는 단순한 실수로 재무제표를 하루 늦게 제출했지만 감사인에게는 기한 내에 제출한 점, 그리고 증선위 개최일정 연기로 추가적인 감사인 지정을 받게 된 점, 끝으로 감사 前 재무제표 제출 위반이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해서 법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조치를 내려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위원) 감사인에게 감사착수일 이전에 감사인 재무제표를 제출하셨다고 했는데 그 건에 대해서 직접적인 증거가 존재하는지?
- ▶ (진술인) 감사인의 ERP시스템에 근무일지가 있음. 제가 지금 사본을 갖고 있는데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음.
- (위원) 지금 갖고 계신 자료 포함해서 감사착수일 이전에 감사 前 재무제표를 제출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있으면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람.

○ (위원) 회사 창립 이후에 처음으로 이런 실수를 하셨다고 했는데, 매우 중대한 사유가 있었는지?

▶ (진술인) 2019년도에 저희가 감리를 받았고, 감리결과 조치에 따라서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재무제표를 모두 다시 작성하는 혼란된 상황이 있었음. 더군다나 당시에 코로나19 발생으로 회계팀원들이 상당히 어려움에 직면해 있었음. 그래서 보다 신중하게 한다고 하는 것이 날짜를 하루 착오로 계산했던 것 같음.

○ (위원) 코로나19 및 감리조치에 따른 전기재무제표 재작성 등으로 업무의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그 상황에 관련된 자료가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섯 번째 진술인이 퇴장함.

○ (위원) ○○○○(주) 건과 관련해서 증선위가 작년에 심의를 했으면 3년 감사인 지정 기간 내에 포함된다고 주장하고 있음. 저희들이 현재 2019회계연도 것을 2022년에 하고 있는데, 2018회계연도와 2017회계연도는 언제 했는지?

- (보고자) 2016회계연도 감사 前 재무제표 제출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2018년 5월23일 증선위에서 의결하였고, 2017년의 경우에는 2019년 7월3일, 그다음에 2018년에 대해서는 2020년 10월28일에 조치하였음.



- (위원) ○○○○(주)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조금 억울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데 조치가 늦어짐으로 인해서 피조치자가 상당한 불이익을 받는다고 했을 때 그것을 고려한 전례가 있는지?
- (보고자) 원래 다음 회계연도에 대해서 감사인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과거 사례 중에 회사의 필요에 의해서 한 해 당겨서 지정한 사례가 있음.
- (위원) 하루 늦게 감독당국에 보고 한 것은 사실이지만 감사인한테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제출했다는 것을 E-mail 같은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서 입증을 한다면 어떻게 되는지?
- (보고자) 그런 경우들은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감경을 하고 있음.
- (위원) 작년에 사전통지 받았을 때 처리를 해줬으면 본 건으로 새로 감사인지정 1년을 부과하더라도 기존에 받고 있는 지정감사인 3년에 포함된다는 주장은 사실인지?
- (보고자) 그러함. 과거에 감리결과 조치에 따라 2020회계연도부터 2022회계연도까지 3개 년도에 대해서 지정감사인으로 부터 감사를 받고 있는 상황임. 따라서 지난해까지 의결되었더라면 회사의 입장에서는 2022년까지만 감사인 지정조치의 효과가 났을 것임.
- 보류하는 것에 동의함

⇒ 보류함

- 의결안건 제169호(2021) 『(주)에스디생명공학의 사업보고서 및 연결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을 재상정하여 금융감독원 회계조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 보고안건 제5호 『민사소송 시 법원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대응방안 보고』을 상정하여 서면보고로 갈음함.

○ 원안접수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접수함

▷ 송창영 위원 퇴장(의결안건 제6호 회피)

- 의결안건 제6호 『(주)아이온자산운용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재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전문사모운용사 전담검사단장이 내용을 설명함.

○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 송창영 위원 입장

## 나. 폐회선언

위원장이 2022년도 제3차 증권선물위원회 회의의 폐회를 선언함.

(18시 16분 폐회)